

[ 종합 ]

美 기준 금리  
또 0.25%P 인상  
5년만에 최고치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년여 만에 최고치인 5.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FRB는 또 '다소(Some)'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남아있다는 견해를 밝히 인플레이션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FRB는 이날 금리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17번째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지난 2001년 3월 이후 최고수준인 5.25%로 올렸다. FRB는 FOMC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위험을 다스리기 위해 "다소간의 추가적인 정책 다지기가 아직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말뉴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1인당 2천만원 지급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됐다거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부상자 등 생존 피해자에게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시내 호텔에서 우리당 문병호 제1정책위원장,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제강점기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은 강제동원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를 비롯해 생존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징용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있는 피해자부터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징용 생존자에게는 사망시까지 연 5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급하고 생환 이후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는 연 14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연말뉴스

토공, 광주 수완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

한국토지공사는 광주수완지구 단독주택용지 450필지를 추첨방식에 의해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되는 단독주택용지는 일반주택용지 285필지(2만16천평)와 전용주택용지 165필지(1만16천평) 등 총 450필지(4만2천평)이다.

일반주택지의 경우 필지당 면적은 64~106평, 평당 공급가격은 130만~203만원이며, 전용주택지는 73~139평, 평당 가격은 108만~134만원이다. 일반주택지의 경우 연면적 40%내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가능한 점이 장점이나 전매는 불가능하다.

분양신청은 토공 토지청약시스템(buy.ikl.co.kr)에 의해 인터넷으로만 진행돼 내달 10일부터 나흘간, 순위별로 신청을 받고, 14일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조선일보 발행인 김문순씨

조선일보는 30일 발행인·인쇄인 겸 대표이사 전무에 김문순(62) 상무를 선임했다. 김 신임 발행인은 계성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68년 조선일보에 입사, 경제부장과 편집국 부국장, 논설위원, 사장실장, 광고국장 등을 거쳤다. 조선일보는 또 주필에 강건성 논설주건을, 광고국장에 김광현씨를 각각 임명했다.

연말뉴스

고길호 신안군수 당선 무효

'향우회 찬조금 기부'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광주·전남 당선자론 처음...10월 25일 재선거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30일 향우회에 찬조금을 낸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61) 신안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31 지방선거에서 군수에 재선된 고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공무담임권도 제한받게 돼 1일로 예정된 신안군수 취임도 불가능하게 됐다. 5·31 지방선거 이후 광주·전남 단체장 중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는 고 군수가 처음

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조치는 수긍이 가고 판단 누락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금품제공 등의 행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결정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한 것이 아닌 이상 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2004년 10월 서울 신안향우회에 찬조금 300만원을 기부하고 같은 해 12월 목포시내 모 식당에서 민주당 신안지역 당원 등 40여명의 식사비 196만원 등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확정 판결은 5·31지방선거 당선자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나온 첫 사례로, 자치단체장이 관행적·의례적으로 한 기부행위로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신안군수 재선거는 오는 10월 25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이산가족 아쉬운 작별

아쉬운 작별을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제14차 남북이산가족 작별 행사에서 28년만에 북측 아들 김영남씨를 만난 어머니 최계월(왼쪽)씨가 머느리 박춘화(오른쪽) 손녀 은경(혜경)양, 손자 철봉군과

연말뉴스

지자체 민선 4기 오늘 출범

특별한 이벤트 없이 3일 일제히 취임식

민선 4기 지방자치가 1일 일제히 시작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지역 시·군·구는 오는 3일 일제히 단체장 취임식을 갖고 민선 4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이번 취임식을 특별한 이벤트 없이 축하공연 정도를 곁들이는 조촐한 수준으로 치른다. 이번 취임식에서는 또 당선자 사례를 금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열려왔던 리셉션 등 행사 뒤풀이가 완전히 없어진다.

광주시는 3일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사회 각계 시민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민선·관선 포함) 박광대 광주시장 취임식을 갖는다.

광주시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 시장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시민 화합의 장

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5분간의 식전 축하공연만이 있을 뿐 취임식은 예전과 다를 없이 간편하게 진행된다.

광주시내 5개 구청장들은 취임식에 앞서 현충탑 및 4·19탑, 학생독립운동기념탑, 국립 5·18민주묘지 등을 참배하며, 기본적인 식순에 따라 30분 내외의 취임식을 갖는다.

전남도도 같은 날 오전 10시 도청 2층 대강당에서 박준영 지사 취임식을 갖는다. 40분간 진행되는 도지사 취임식 단상에는 유지원생과 모범근로자, 우체부, 축산인, 여성이 장, 소방대원 등 22개 시·군 대표가 오른다. 반면 기관장들은 단 아래 앉아 몸을 낮추게 된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 취임

식도 '검소하게, 주민 위주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치러질 전망이다. 나주시는 오는 3일 취임식 식전 행사로 열리는 '남산공원 총혼담 참배'를 불우이웃과 예술인 등 나주시를 대표하는 37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여수시는 오현섭 당선자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취임식이 오는 7일로 늦춰졌다. 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취임식은 이벤트 회사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되며, 개식선언과 약력소개, 취임선서, 축가 등 최소한의 일정으로 검소하게 치러진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설

민의와 경제 쟁기는 민선 4기 기대한다

오늘 임기 4년의 민선 4기 지방자치가 출범한다. 신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삼기 일전의 노력을 기울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제대로 이뤄져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민주정치가 살아날 수 있다.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은 그만큼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특히 오는 2030년이면 현재 인구의 31%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전남 일부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자구 노력이 없을 경우 최소한의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이 높다. 막연히 중앙정부 지원만 기대해서도 안된다. 지역 푸대접론을 들먹이며 예산을 구걸하지 말고 면밀한 개발계획 수립으로 중앙정부가 그 사업에 돈을 지원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라는 것이 민

선 1기부터 내리 3번 연임했던 김홍식 전 장성군수의 충고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등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벌여야 한다. 단체장들이 세일즈맨이 되어 공장과 관광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한미 FTA 타결에 대비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민선 4기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편파인사는 사라져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남발했던 공약 가운데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은 과감히 폐기처분해야 옳다. 지방자치의 주민들의 관심과 감사가 없으면 안된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를 기대한다.

서민경제회복 시기 내년 대선에 맞춘다

지난달 29일 밤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가진 후 구체적 정책변환의 첫 번째로 재산세 경감조치가 취해졌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며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지 세금액탄을 맞게 한 실수를 바로잡는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민심이란 원인에 대해 밤늦도록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는 뒤끝에 취해진 정부조치가 고작 이정도 인가 하는 실망감을 갖게 된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이미 50% 감감방안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마당에서 정부가 국면전환을 위해 생색 낼 사안이 못된다.

이날밤 대화의 절반이상이 부동산 문제였다는 것도 민심이란 본질과는 빗나간 것이다. 부동산 문제가 큰 물의를 일으키기는 했으나 그보다는 편가르기

정치, 코드 인사, 불안한 외교, 땅에 떨어진 공권력, 반기업적 경제정책, 평등주의 교육관등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전반이 국민을 등돌리게 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 세금만 덜 걷으면 민심이 돌아설 것으로 보는 건가.

더욱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노대통령이 서민경제의 회복 방안을 말하면서 "당장 일가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 몇달 안에 해결될 것처럼 해선 안된다"며 "내년 하반기에 맞추자. 그때가 대선 아니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양극화 문제를 그토록 강조할 땐 언제고 허덕이는 서민경제를 대통령 선거전략에 맞추자는 말인가. 우리는 이말이 대통령의 솔한 말실수 중 하나일지 바라지만, 경제고 민생이고 권력유지가 우선이라는 대통령의 본심을 본 것같이 씁쓸하기 그지없다.

대법관 후보 5명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가능한 박일환 안대희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 후보자 5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재적의원 295명 중 249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가능한 후보자 찬성 238표(찬성률 95.6%), 박일환 후보자 찬성 233표(93.6%), 안대희 후보자 찬성 196표(78.7%), 이홍훈 후보자 찬성 231표(92.8%), 전수안 후보자 찬성 217표(87.1%)로 각각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후보자 5인에 대한 당론찬성,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각각 정한 뒤 표결을 내렸다.

국회는 또 김대량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승인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0표(56.2%)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하원호, 조세열, 이지원, 이윤강, 양태훈, 박영림, 장광인, 이준식, 김창국씨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9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도권 인구억제 '인구상한제' 도입

수도권 인구의 확대를 막기 위해 시·군별 로 목표 인구를 할당해 관리하는 인구상한제(ceiling)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울에만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제를 수원·성남·부천 등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대신 개별공장 집단화를 위해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물량의 30% 범위내에 추가 공급토록 해 공장총량제를 일부 완화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6~2020년)을 상정,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내달초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연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시도별 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2020년 수도권 인구목표는 2004년 2천305만명에서 75만명 늘어난 2천375만명으로 하고 기반시설 여유분을 감안한 시도별 인구지표는 서울 980만명, 인천 310만명, 경기 1천450만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1천450만명 범위내에서 시·군과 협의, 최대 인구를 시·군별로 할당하고 시·군은 인구에 맞는 기반시설 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의 관리계획을 짜야 기반시설 설치 등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연말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이쯤되면 허리 펴긴 틀렸다

“언론자유 침해 조항 ‘합헌’ 유감”

신문협성명, 자료 신고기한 재연기 요청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과 관련, "정지권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조항에 대해 조속히 합리적 개정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위헌 소지가 있거나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해 온 조항들에 대해 상당수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신문법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조항 등에 대해 조속히 합리적 개정 및 보완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문협회는 관계 당국에 "경영자료 신고조항은 합헌 결정이 났으나 신문경영상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신고 항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 시행상의 보완조치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신문협회는 신문법의 경영자료 신고 조항이 합헌 결정됨에 따라 지난달 30일인 자료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고 신고 항목도 재조정해 줄 것을 문광부와 신문발전위원회에 요청했다.

신문협회는 "신고기한이 지난달 30일로 한 차례 조정됐으나 대다수 회원사들이 현재 결정에 따라 제출 여부를 확정할 태세였던 관계로 행정절차상 일정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방대한 신고자료를 현재 결정일 바로 다음날까지 준비하고 제출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주장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鎭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廣州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홍합부 2200-626	광국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서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